2011년 경위, 경감 실무종합 승진문제

1. 경찰의 기본적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1 경위)

- ㉠ 경찰의 임무는 행정조직법상의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의 방지가 경찰의 궁극적 임무이다.
- ㉡ 공공의 안녕은 법질서, 권리, 각 개인의 법익, 국가 또는 기타 공권력 주체의 기관과 집행의 불가침성을 뜻한다.
- ㉢ 경찰은 인간의 존엄성·명예·생명·건강·자유 의 개인법익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도 보호한다.
- ㉣ 오늘날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 대한 법적 전면규범화 증가추세에 따라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가능 분야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①(㉣)

해설 - ㉣ 오늘날 모든 생활관계에 대한 법적 전면규범화 추세 → 공공질서 적용여지는 점차 축소

2. 경찰의 기본적 임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1 경감)

- ㉠ 경찰의 임무는 행정조직법상의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의 방지'가 경찰의 궁극적 임무라 할 수 있다.
- ㉡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다시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이 중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가 된다.
- ㉢ '위험의 방지'와 관련하여 위험에 대한 인식 중 '오상위험(추정적 위험)'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 ③(㉢)

해설 - ㉡ 공공의 안녕이란 개인의 생명·신체(건강)·명예·자유와 재산과 같은 개인적 법익과 객관적인 성문의 법질서, 국가 및 그 밖의 공권력주체의 제도와 시설과 같은 국가적 법익이 침해되지 않는 상태 이고, 이 중 **법질서의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가 된다.

㉢ 위험의 방지와 관련하여 위험에 대한 인식 중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는 외관적 위험이다.

3. 코헨과 펠드버그가 제시한 민주경찰이 지향해야 할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위)

- ① 경찰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성별·종교 등에 의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 ② 경찰관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③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사회계약의 목적이고, 법집행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므로, 경찰의 법집행은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라는 틀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 ④ 탈주범이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할 경우, 형사과 직원이 동료직원들과 임무와 역할을 분담하여 검거 작전에 나서는 것은 '협동'에 충실한 것이지만, 다른 행정기관과 협조하는 것에 대해서 코헨과 펠드버그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정답 - ④

해설 - 경찰의 내부구성원간 협력의무 뿐만 아니라 경찰과 다른 기관과의 협조 내지 협동도 중요하다.

4. 경찰의 기본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위)

- ① 경찰의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분배, 경찰행정정보의 공개, 성과급 제도 확대는 경찰의 민주성 확보방안이다.

- ② 경찰의 활동은 사전에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함이 없이 행사되는 즉시강제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치주의 원리가 강하게 요구된다.
- ③ 국민의 권리의무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④ 경찰은 특정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이익이나 이념을 위해 활동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주권자인 전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주의이다.

정답 - ①

해설 - ① 성과급 제도는 경영주의를 위한 제도이다.

5. 다음은 경찰의 기본이념 및 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甲~丁의 주장을 나열한 것이다. 이 중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2011 경감)

甲 : 경찰권은 국민으로부터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라는 태도는 민주주의 이념과 관련이 깊다.
 乙 : 경찰작용은 그 침익적 성격으로 인해 법치주의의 엄격한 적용을 받지만, 순전한 임의(비권력적) 활동의 경우라면 개별적 수권규정이 없이도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도 조직법적 근거는 있어야 하므로 직무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丙 : 경찰의 이념 중 민주주의 이념은 대국민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丁 : 경찰의 이념 중 인권존중주의는 비록 경찰법에서는 언급이 없으나, 헌법상 기본권 조항 등을 통하여 당연히 유추된다.

- ① 甲 ② 乙 ③ 丙 ④ 丁

정답 - ④

해설 - ④ 국가는 개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헌법 제10조),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경찰법 제4조).

6. 경찰청훈령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 내용과 다른 것은?(2011 경위)

-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 친족 포함)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 ④ 위 ③번과 관련, 소명 후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정답 - ②

해설 - 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

7. '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위)

- ① 피의자 등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수사경찰에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경찰 이념은 인권존중주의이다.
- ② 헌법에서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③ 경찰법에서는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④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경찰비례의 원칙'은 경찰학에서 논의되는 일반 원칙일 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이와 관련한 규정은 아직 없다.

정답 - ④

해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 비례원칙이 명문화되어 있다.이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②).

8. 경찰부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위)

- ①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셔먼 등에 의하여 주장된 이론으로 공짜 커피, 작은 선물 등 사소한 호의일지라도 엄청난 부패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공짜 커피조차도 경계하라고 한다.
- ② 월슨은 시카고 경찰의 부패를 '경찰은 시카고 시민에 의해서 부패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전체사회 가설'이라고 한다.
- ③ 클라이니히는 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을 제시하면서 내부문제를 외부에 공표하기 前, 조직 내 다른 채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면 먼저 내부적 해결을 해야한다고 한다.
- ④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는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정답 - ④

해설 - ④ 모럴 해저드 - 도덕적 해이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whistle blowing이라 한다.

9. 경찰의 부정부패 사례와 그에 대한 원인분석을 설명하는 이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 ①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 A는 순찰 도중 동네 슈퍼마켓 주인으로부터 음료를 얻어 마시면서 친분을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폭행사건처리 무마 청탁을 받고 큰돈까지 받게 되었다면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 ② 경제팀 수사관 A가 기소중지자의 신병인수차 출장을 가면서 사실은 1명이 갔으면서도 2명분의 출장비를 수령하였다면, 그 원인은 행정내부의 '법규 및 예산과 현실의 괴리'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 ③ 정직하고 청렴하였던 신입형사 A가 자신의 조장인 B로부터 관내 유흥업소 업자들을 소개받고, 이후 B와 함께 활동을 해가면서 B가 유흥업소 업자들로부터 월정금을 받는 것을 보고 점점 그 방식 등을 답습하였다면 '구조원인 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
- ④ B지역은 과거부터 지역주민들이 관내 경찰관들과 어울려 도박을 일삼고, 부적절한 사건청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아무도 이를 문제화하지 않던 곳인데, 동 지역에 새로 발령받은 신입경찰관 A에게도 지역주민들이 접근하여 도박을 함께 하게 되는 경우는 '썩은 사과 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

정답 - ④

해설 - ④ 전체사회가설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이다.

10. 악법에 대한 법철학적 논의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 ① 실정법이 자연법에 우선함을 강조하면서 일정한 경우 실정법에 위배된 자연법의 구속력을 부정한다면 이는 자연법론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
- ② 경찰이 악법에 대하여 자연법론적 관점을 가지면 악법에 대한 저항을 어느 정도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게 될 수 있다.
- ③ 공동체가 추구하는 객관적 윤리질서보다 법적안정성에 중점을 둔다면 이는 법실증주의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제정된 법이면 악법도 법이라고 보는 것은 법실증주의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 ①

해설 - ① 악법에 대한 태도 - 법적 안정성 강조, 자연법 부정(객관적 윤리질서보다 실정법우선시)

11. 한국경찰의 역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 ①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육살, 백제의 방령, 신라의 군주 등이 지방행정과 치안책임을 병행하였다.
- ② 고려시대의 중앙경찰기관으로는 어사대, 형부, 의금부 등이 있었다.
- ③ 조선시대(갑오경장 이전)의 경찰권은 일원화되지 못한 채, 각 관청이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직권에 의하여 범법자를 체포·구금할 수 있었다.
- ④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이 독립관청화 되었다.

정답 - ②

해설 - ② 고려시대의 중앙경찰기관으로는 병부, 형부, 중추원, 금오위, 어사대 등이 있다. 의금부는 조선시

대의 경찰기관이다.

12. 경찰법의 법원 중 성문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1 경위)

- ㉠ 헌법전 가운데 행정의 조직이나 작용의 기본원칙을 정한 부분은 그 한도 내에서 경찰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 ㉡ 경찰권 발동의 근거는 모두 법률에 근거해야 하므로 법률은 경찰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법원이다.
-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을 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수 있다.
- ㉤ 일반적으로 정의에 합치되는 보편적 원리로서 인정되고 있는 제 원칙을 조리라 하고, 법으로 취급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 ②(㉡)

해설 - ㉡ 조리(법의 일반원칙)은 불문법원에 포함된다.

13. 경찰행정법상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비례원칙의 실정법적 근거는 「헌법」 제37조 제2항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을 들 수 있으며, 경찰작용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부 원칙인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 중 적어도 하나는 충족해야 한다.
- ②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현행 「행정절차법」이 일반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 ③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구속의 근거가 되는 행정관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④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정답 - ①

해설 - ① 비례원칙의 법적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②를 들 수 있으며, 경찰 작용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세가지 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 적법한 경찰작용.

14.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에서 감독수단이 되는 훈령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 ① 훈령(외부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은 내부규범으로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다.
- ② 훈령의 형식적 요건으로는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직무상 독립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을 들 수 있다.
- ③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하여 발해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할 수 있다.
- ④ 서울종로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울지방경찰청 훈령과 경찰청 훈령이 경합할 때에는 경찰청 훈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이 옳다.

정답 - ④

해설 - 직근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라야하므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훈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이 옳다.

15.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위탁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1 경감)

- ㉠ 권한의 위임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한다.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위탁기관의 수임 및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 법정대리는 법정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직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관계가 발생하므로 원칙상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 ③(㉠㉡)

해설 - ㉠ 위입기관은 수임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법정대리는 복대리가 가능하다.

16. 경찰공무원의 의무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①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법률상 명시적 규정이 있다.

②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우 재산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③ 직장이탈금지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된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경찰공무원의 의무는 크게 선서의무, 성실의무, 직무상 의무, 신분상 의무 등으로 나눌 수도 있는 바, 이중 직무상 의무에는 법령준수의 의무 및 복종의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 - ③

해설 - ③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현행범인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2항).

17.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1 경감)

- ㉠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한다.
- ㉡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 ㉢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에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상 정상참작 사유로 감독자의 참작사유에 해당한다.
- ㉣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지만,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③(㉠㉡㉣)

해설 - ㉡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는 감독자의 정상참작사유가 아니라 본인의 정상참작사유이다.

㉣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을 표결권을 가지고 있다.

18. 경찰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 경위)

① 경찰청에 설치하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한다.

③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한 파면 처분의 경우 퇴직수당은 1/4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결을 거치게 되고, 그 의결만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 ②

해설 - ① 경찰청에 설치하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과 경정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퇴직급여제한(재직기간 5년 미만 - 1/4, 재직기간 5년 이상 - 1/2 감액지급)

④ 징계위원회의 의결만으로 효력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권자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

19. 소청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1 경위)

- ㉠ 소청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이다.
- ㉡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원 징계처분에서 부과한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 ㉣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 ①

해설 - 모두 옳은지문

20.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1 경위)

-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는 경찰권 발동권한을 포괄적으로 수권하는 규정이지만, 개별적 수권규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제2차적·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다.
- ② 락뵡판결은 경찰법상의 일반수권조항의 해석에 있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재량권 확대이론에 의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로서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효시로 평가된다.
- ③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관계없는 사적관계에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이다.
- ④ 편의주의 원칙은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수사법정주의 원칙의 개념으로 경찰위반의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권을 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발동의 여부 또는 어떠한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당해 경찰관청의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른다는 원칙이다.

정답 - ①

해설 - ② 락뵡판결은 경찰법상의 일반수권조항의 해석에 있어 행정(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하고 재량권0으로 수축이론에 의거하여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효시로 평가된다.

③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작용이므로 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생활관계에 대해서는 발동할 수 없다는 원칙은 경찰공공의 원칙이다.

④

21. 경찰권발동의 근거 및 한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의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관련 규정을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 ②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시 경찰개입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 ③ 경찰권 발동의 대상인 경찰책임과 관련하여 경찰위반의 상태는 개별적인 경우를 규율하는 법규위반(위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 혹은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나 상태로부터 나온다.
- ④ 공무원의 직무명령의 수행으로 파생된 개인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므로 그 이익이 침해될 경우 재판을 통해 구제된다.

정답 - ④

해설 - ④ 행정상의 강행법규에 의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거나 행정청의 행위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져 있는 경우에 개인이 그로 인하여 일정한 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관계법규가 전적으로 공익목적만을 위한 것인 때에는 사인이 받는 이러한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공무원의 직무명령 수행으로 인하여 파생된 개인적 이익은 반사적 이익으로 본다. 따라서, 그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가 없다.

22. 경찰의 기본적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불심검문의 절차한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 ①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던 중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임의동행을 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하려면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

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③ 임의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서에 적법하게 동행을 한 경우에도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정답 - ①

해설 - ①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부근의 경찰관서에 임의동행 요구가능하다. 신원확인이 불가능한경우는 임의동행요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3. 경찰관의 주취자 처리요령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① 손님이 많은 음식점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계속하더라도 경범죄에 해당할 뿐이므로 경찰관이 위 주취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여지는 전혀 없다.

② 위해 우려가 없더라도 만취자는 술에 취한 정도에 따라서 사망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신속히 병원 등에 후송하여 구호조치하고 연고자 확인시 가족에게 인계한다.

③ 불시 공격, 장구 피탈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방어태세를 유지한다.

④ 주취 소란자는 연행 이전에 상처여부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로 설득 후 동행한다.

정답 - ①

해설 - 경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주거불명이라면 현행범체포할 수 있다.

24.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2011 경위)

- ㉠ 「경찰공무원법」에는 경찰관이 무기를 휴대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위해를 수반할 수 있다.
- ㉣ 범인 또는 소요 행위자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위해를 수반할 수 있다.

- ① ㉠㉡ ② ㉡㉢
- ③ ㉠㉢㉣ ④ ㉢㉣

정답 - ④

해설 - ㉠ 무기휴대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일 뿐이다.

㉡ 무기사용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일 뿐이다.

2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위)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결정할 수 없다.

④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 ③

해설 - ③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에 대해서도 실시기관은 공개결정 가능하다.

25. 경찰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위)

①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집행벌(이행 강제금)은 경찰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며, 간접적·심리적 강제수단이다.

- ③ 강제징수란 경찰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며 일반법으로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한다.
- ④ 직접강제란 경찰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의무자의 신체·재산 등에 직접적으로 실력을 가함으로써 의무의 이행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정답 - ③

해설 - ③ 강제징수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 불이행시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며 일반법으로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한다.

26.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2011 경감)

<사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형사 A는 자신이 배당받은 절도사건을 수사하던 중 용의자가 현재 17세인 B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소재를 확인하여 검거하는 과정에서 B가 순순히 연행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장구인 호신용경봉으로 제압하던 중 흥분하여 잘못 휘두르는 바람에 B의 얼굴에 맞게 되었고, 이로 인해 B의 코뼈가 부러지게 되었다.

- ㉠ 사례에서 A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관련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이 고려될 수 있다.
- ㉡ 사례의 경우 B의 입장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사례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이는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 ㉣ 사례에서 B의 경우 자신의 배상청구권을 친구인 C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③(㉡㉢㉣)

해설 - ㉡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피고는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 ㉢ 사례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지,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자로서 인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 ㉣ 생명·신체침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압류금지된다.

27. 조직 내부의 갈등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갈등의 해결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 ① 갈등에 대한 장기적 대응방안으로 조직원의 행태개선 등을 들 수 있다.
- ② 갈등의 원인이 세분화된 업무처리에 있다면 조정보다는 전문화에 힘써야 한다.
- ③ 문제해결이 어려울 때는 갈등을 완화하는 방법도 있다.
- ④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관리자는 업무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해 줌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수도 있다.

정답 - ②

해설 - ② 갈등의 원인이 세분화된 업무처리에 있다면 업무처리과정을 통합하든지 연결하는 장치나 대화채널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28. 경찰조직의 지도원리 또는 경찰조직상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 ① 경찰조직은 불편부당, 공평중립을 요하는 경찰의 본질상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필요로 한다.
- ② 경찰작용은 권력적 수단이므로 경찰조직은 민주성의 확보가 강력히 요구된다.
- ③ 경찰권 행사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침해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 ④ 경찰위원회는 민주적 통제장치라고 볼 수 있다.

정답 - ③

해설 - 우리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모두 독임제를 취하고 있다.

29.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직위분류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1 경감)

- ㉠ 동일직무동일보수의 원칙 ㉡ 신축적 인사배치 ㉢ 일반 행정가 양성에 유리
 ㉣ 신분보장 강화 ㉤ 권한과 책임한계의 불명확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①(㉠)

해설 - 직위분류제의 특징 - 1909년 미국 시카고시에서 처음 실시
 직무중심의 분류방법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의 중요성 강조, 인사배치의 자의성·정실화 방지, 전문행정가 양성, 기관간의 횡적협조 곤란, 신분보장 미약, 보수의 합리적 기준제시 -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원칙, 인사행정의 합리화 - 시험·채용·전직의 합리적 기준제공, 개방형 총원방식

30. 경찰서장 甲은 소속 경찰관들의 사기 앙양 방법을 모색 중이다. Maslow의 욕구이론과 경찰조직이론에 비추어 볼 때 甲이 취할 사기 앙양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 ① 소속 직원들 개개인을 인격의 주체로서 합당한 대우를 해준다.
 ② 소속 직원들간 인간관계의 개선을 통하여 Maslow가 언급한 자기실현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
 ③ 직원들의 불만·갈등을 평소 들어줄 수 있도록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Maslow가 언급한 사회적 욕구를 해소하여 준다.
 ④ 자연·학연 등에 의한 편파적 인사나 대상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인사를 배제한다.

정답 - ②

해설 - ② **공정·합리적인 승진, 공무원단체활동** 을 통하여 자기실현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 인간관계개선은 사회적 욕구(애정욕구)충족방법이다.

31.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1 경위)

- ㉠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에 그 내용을 변경하는 예산은 수정예산이다.
 ㉡ 세출예산의 대상성질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는 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회를 통과하여 예산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 ②(㉡)

해설 - ㉠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한 후 예산이 성립(확정)되기 전에 사유가 발생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예산은 수정예산이다.

㉢ 예산요구서 작성제출은 6월 30일까지이다.

㉣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서 확정되었다더라도 당해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원인행위 금지

32. 경찰서장 甲은 관할서에 부임한 뒤 기존 직원들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많은 행정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직원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저항이 발생하는 원인 및 이에 대한 극복 방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 ① 甲이 무궁화 포럼에서 직원들 전체를 모아 놓고 교육훈련을 통해 의식개혁을 시도하였다면 이는 Etzioni의 공리적 전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甲은 직원들이 개혁에 대해 저항하는 원인에는 기득권의 침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③ 甲은 개혁을 실행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참여적·상향적 개혁전략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④ 만약 甲이 취임사를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직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절대 금품을 받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단돈 1천원이라도 받으면 중징계 하겠다고 공언하였다면 이는 Etzioni의 강제적 전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 ①

해설 - ① 이는 규범적 전략이다.

극복전략(에찌오니) - **공리적 전략** - 경제적 보상을 이용하는 방법

강제적 전략 - 저항에 대한 제재를 이용하는 방법

규범적 전략 - 개혁지도자가 카리스마, 개혁의 논리와 당위성에 대한 여론등을 이용하는 전략.

33. 구체적·결과적인 목표를 중시하는 MBO(목표에 의한 관리)의 특성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 ① 참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함으로써 민주적 관리풍토를 조성
- ② 갈등의 극소화를 중시
- ③ 조직목표와 조직 속의 개인 목표를 분리
- ④ 수행결과의 평가 및 환류

정답 - ③

해설 - ③ 조직목표와 개인목표의 **통합**이 옳은지문

34. 치안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 ① 치안지수란 국민들이 평가한 각종 범죄 및 교통위험에 대한 불안수준, 범죄간의 상대적 중요도 등을 기초로 산출한 지표를 말한다.
- ② 치안지수를 통하여 범죄발생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 ③ 치안지수를 통하여 범죄유형별로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인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 ④ 지역별로 치안지수를 산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다.

정답 - ②

해설 - ② 치안지수를 통해 범죄발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5.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구조개혁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1 경감)

㉠ 일상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현행 수사구조가 현실과 법규범간의 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반대론자들의 논거이다.

㉡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찬성론자들은 범죄수사란 본질적으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행위로 보고 논의를 한다.

㉢ 검사는 소송당사자로 객관적인 공소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개입하여 실제진실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찬성론자들의 입장이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 ④

해설 - 모두 틀린지문입니다~

36.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찬성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위)

- ① 국가공권력의 대표격인 수사권을 공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소수의 검사에게 독점시켜 견제장치가 없는 현실에서는 검찰의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다.
- ② 행정조직의 기본원리로 명령통일의 원리를 중요한 요소로 하고 있는데, 경찰의 하부 계층에서는 이중의 지휘를 받게 되어 행정조직원리에 위배된다.
- ③ 경찰이 인지한 대부분의 일상범죄에 대한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가 있다.
- ④ 수사의 합목적성을 추구할 수 있어 적정절차와 인권존중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고, 법률 전문가의 수사 전과정 지휘를 통해 법집행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

정답 - ④

해설 - 수사권찬성론이 아니라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반대론의 논거이다.

㉔ 경찰의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헌법상 사생활의 보호와 알 권리 간의 균형 있는 조화가 필요하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 ①
해설 - 모두 옳은 지문

41. 지구대 CCTV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경찰장비관리규칙」에 의함)

- ① 민원 또는 사건·사고와 관련된 녹화CD 등은 1개월간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특별관리한다.
- ② CCTV 모니터는 상황근무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적정녹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경찰서장은 외근감독 순시계획 수립시 CCTV 운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음주소란·난동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모든 행위가 CCTV에 녹화되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정답 - ②
해설 - CCTV모니터는 상황근무자가 아니라 민원인 등이 잘볼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규칙」에 따른 지구대·파출소출장소에 대한 설치권자(보기 1)와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지역경찰의 근무 요령(보기 2)에 대하여 바른 설명은 각각 몇 개인가?(2011 경위)

<보기 1>
㉠ 경찰서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폐지하거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센터를 둘 수 있다.

<보기 2>
㉠ 행정근무는 각종 현황·통계·부책 관리 및 중요 사건·사고 발생 시 보고·전파 업무를 수행한다.
㉡ 순찰근무는 경찰방문·방범진단 및 범죄 예방·위험발생 방지 활동을 수행한다.
㉢ 112 순찰근무 및 야간 순찰근무 시 인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1인이 수행하여도 무방하다.
㉣ 경계근무 시 피습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4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해야 한다.

- ① <보기1> - 2개, <보기2> - 1개 ② <보기1> - 2개, <보기2> - 2개
③ <보기1> - 1개, <보기2> - 1개 ④ <보기1> - 1개, <보기2> - 2개

정답 - ③
해설 - ③ <보기1> - ㉠ 지방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지방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폐지하거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기2> - ㉠ 중요 사건·사고 발생 시 보고·전파 업무는 상황근무이다.
㉢ 112 순찰근무 및 야간 순찰근무 시 반드시 2人以上 합동으로 지정해야 한다.
㉣ 경계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해야 한다.

43. 「실종아동등가출인 업무처리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 경위)

- ① 경찰서장은 장기실종아동등에 대해 정보통신망 수배일로부터 1월까지 10일에 1회, 1월이 경과한 후에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 통보 및 귀가 여부를 확인한다.
- ② 실종아동등, 가출인, 치매질환자, 보호자 중 일부가 가출 시 동행한 실종아동등은 경찰정보통신망 수배대

상이다.

③ 치매질환자는 60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종아동등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찾는 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발생신고 접수 시 범죄와의 관련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고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합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정답 - ①

해설 - ② 경찰정보 통신망의 수배대상자는 실종아동등, 가출인, 보호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변사자·교통 사고 사상자 중 신원불상자, 치매질환자이다. 보호자 중 일부가 가출시 동행한 실종아동등은 경찰정보통신망 수배대상자가 아니다.

③치매질환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실종아동등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찾는 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찾는 실종아동등·가출인의 발생시도 접수시 범죄와의 관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고를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합동심의위원회를 구성·심의를 하여야 한다.

44. 생활질서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위)

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목욕장업은 풍속영업의 대상이 아니다.

② 경마경륜·카지노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행성게임물'이다.

③ 「유실물법」상 물건의 반환을 받은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전자총격기·가스분사기·석궁·어획총은 모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소지허가를 필요로 한다.

정답 - ④

해설 - ④ 어획총은 지방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필요로 한다.

45.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가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2011 경위)

- ㉠ 「청소년보호법」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 ㉡ 공부상 출생일과 다른 실제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자임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하여 주류 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다. 단,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 '홀딱쇼' 등 은밀한 부분을 노출시키고 접대하는 행위, 안마시술소의 퇴폐적 안마, 증기탕의 목욕접대 등도 성적 접대행위에 포함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①(㉣)

해설 - ㉠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더라도 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 공부상 출생일과 실제 출생일이 다르다면 실제 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부상 출생일과 다른 실제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자임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하여, 피고인을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판례).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다.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의 경우(동법 제11조 제3항)에 미수범도 처벌한다.

②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배포행위는 동법에 의한 단속대상이 된다.

③ 동법 제2조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는 신체의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된다.

④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자도 동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정답 - ①

해설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의 경우(동법 제11조 제3항)는 미수

범 처벌하지 않는다.

4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1 경위)(단, 지문의 아동·청소년은 동법의 적용 대상으로 본다.)

- ① 노래방을 운영하는 甲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 A가 놀러오자 손님방에 들어가 노래와 춤으로 손님 유혹을 도우게 하여 동법에 의하여 처벌 받았다.
- ② 영화관 주인 乙은 심야에 웃돈을 받고 아동 B가 나오는 음란물을 공연히 상영하려다 영사기 고장으로 미수에 그쳤으나, 동법에 의하여 처벌 받았다.
- ③ 말년 휴가를 나온 丙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동 C를 발견하고,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근처 학교로 유인해 강제추행 하였으나,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 동법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 ④ 丁은 야간에 술을 마시고 근처에 있던 청소년 D의 성을 사려고 말을 걸었으나, 미수에 그쳐 동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았다.

정답 - ④

해설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의 경우에 미수범도 처벌하지 않는다.

- ①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된다.
- ②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한 미수범처벌하고 상영은 미수범처벌하지 않는다.
- ③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비친고죄이다.

48. 경범죄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가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2011 경위)

- 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지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현행범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한하여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 ② 선교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소정의 인근소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그러한 행위가 통상의 범위를 일탈하여 다른 법익의 침해에 이를 정도가 된 것인지 여부 등 법익간의 비교교량을 통하여 사안별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 ③ 경미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를 통고받고 이를 이행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을 통고처분이라고 하며, 그 대상은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 구류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18세미만인 사람이다.
- ④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2차 납부기간(1차 납부기간 만료되는 다음날로부터 20일 이내) 내에는 범칙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정답 - ③

해설 -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 구류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18세미만인 사람은 범칙자 제외사유이다. 범칙자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고처분할 수 없다.

49. 행사장 경호경비의 요령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위)

- ① 제1선(안전구역-내부)은 절대안전 확보구역으로 MD설치 운용, 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가 이루어진다.
- ② 제1선(안전구역-내부)은 승·하차장, 동선 등의 취약개소로 피경호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지역을 말한다.
- ③ 제2선(경비구역-내곽)에 대한 경호책임은 경찰이 담당하고 군부대 內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④ 제3선(경계구역-외곽)은 조기경보지역으로 주변 동향파악과 직시고층건물 및 감제고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다.

정답 - ③

해설 - ③ 제2선(경비구역 : 내곽) - 경호책임은 경찰이 담당하고 군부대 內일 경우에는 군이 책임.

50. 대형백화점이 붕괴되어 현장지휘본부가 설치되자 관할경찰서장 甲은 각 기능별 임무에 대하여 지시하고 있다. 甲의 지시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 ① 생활안전 기능에서는 유류품의 접수 및 인계, 사상자 소지품의 약탈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 ② 경비 기능에서는 동원경력장비의 확보, 비상소집, 비상출동로의 사전지정 및 관리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 ③ 수사 기능에서는 피해자의 신원확인, 사고원인 및 범죄관련 여부의 수사 등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④ 정보 기능에서는 피해자 가족의 동향 파악 등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정답 - ②

해설 - ② 비상출동로의 사전지정 및 관리는 교통기능에 포함 된다.

51. 최근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사건 등과 관련, 우리 경찰도 이에 사전대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바, 이와 관련하여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① 매년 연습당일 H시를 기하여 국가기관 전 공무원 비상소집과 동시에 을지연습이 개시되고 군사상황과 연계시켜서 을지3종 및 을지2종 사태와 국가동원령이 선포된다.

② 전시에 대비하여 경찰은 크게 민간인의 이동계획, 군 보급로의 확보, 비상충원 계획실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③ 을지연습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연습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④ 전시대비 업무수행절차의 숙달을 목표로 하는 방어목적의 훈련이다.

정답 - ③

해설 - ③ 을지연습은 국무총리가 연습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52. 다음 ()에 들어갈 3가지의 수치를 모두 합하면?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에 따름)(2011 경위)

- ㉠ 제1종 대형면허로는 도로를 운행하는 ()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다.
- ㉡ 운전자 A는 적성검사를 신청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때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일이다(연장은 고려치 않음)
- ㉢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한 날부터 ()년간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제한받는다.

① 24 ② 25 ③ 26 ④ 27

정답 - ②

해설 - ㉠ 제1종 대형면허로는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다.

㉡ 운전자 A는 적성검사를 신청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때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이다(연장은 고려치 않음)

㉢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한 날부터 (2)년간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제한받는다.

53. A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 甲은 소속 직원들에게 교통사고 처리기준에 관한 교양을 하고 있다. 다음 중 甲의 교양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단, 현재 시행중인 법령 및 「교통사고처리지침」에 의함)

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처상의 결과가 야기되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합의가 되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되, 그 원인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해당법조를 적용토록 하였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하였다.

③ 학교 구내(담장 및 차단기가 있고, 경비원이 통제하는 곳)에서 단순 물적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151조를 적용하여 형사입건하도록 하였다.

④ 단순 물적피해사고일 경우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 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과 「교통사고처리지침」을 적용하여 ‘내사종결’로 처리하되, 그 원인행위가 명확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해당법조를 적용하여 통고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정답 - ③

해설 - ③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리되는 교통사고는 인피사고이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사고에 한정하므로 도로가 아닌 학교구내에서 발생한 단순물적피해 사고는 도로교통법으로도 의율할 수 없다.

54. 교통사고와 관련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①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이미 신호위반의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된다.

② 횡단보도 내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앉아 있는 사람을 충격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④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보행자 통행신호인 녹색으로 되었을 때 차량운전자가 그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자를 충격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단,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는 고려치 않음)

정답 - ①

해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그 행위의 성격 및 내용이나 죄질, 피해법익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도4322).

55.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1 경위)

①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② 일반도로 주행 중 반대방향 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까지 미리 예견할 의무는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다고 하여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

③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지만 감속 서행할 의무는 있다.

④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움직였으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정답 - ①

해설 -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감속 서행할 의무도 없다.

④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려서 자동차가 움직였으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56. 경찰정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1 경감)

- ㉠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는 정보의 기능에 따른 분류이다.
- ㉡ 전략정보와 전술정보는 형식효용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없다.
- ㉢ 판단의 불명확성은 정보사용자로부터의 장애요인이다.
- ㉣ 정책과 정보의 관계에 대하여 행동주의를 따를 경우 현용정보에 치중하게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③(㉠㉢㉣)

해설 - ㉡ 전략정보(최고정책결정자에게 제공)와 전술정보(낮은 수준의 정책결정자나 실무자에게 제공)는 형식효용에서 차이가 있다.

㉢ 판단의 불명확성은 정보생산자로부터의 장애요인이다.

㉣ 정책과 정보의 관계에 대하여 **전통주의**를 따를 경우 현용정보에 치중하게 된다.

57. 최근 구제역 문제가 심각해지자 축산업자들은 2011년 1월 초순경 A단체를 구성하고 2011. 1. 15(토) 13:00에 경기도 과천시 소재한 과천정부종합청사(농림수산식품부) 앞 운동장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오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만을 고려하며, 각 문항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음)(2011 경위)

- ① A단체는 집회장소를 관할하는 과천경찰서장에게 2011. 1. 13(목) 13:00이전까지 집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 1. 10(월) 13:00경에 A단체의 집회 신고를 접수한 과천경찰서장은 그 자리에서 접수증을 교부하였고,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기재사항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11(화) 01:00까지 보완통고를 해야 한다.
- ③ 1. 15(토) 11:00부터 같은 장소에서 B노동조합의 신고된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면, 과천경찰서장은 먼저 신고한 B노동조합 집회의 평화적 개최보장을 위하여 뒤에 접수된 A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 할 수 있다.
- ④ A단체가 과천경찰서장으로부터 1. 12(수)에 금지통고를 받았다면,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때는 1. 19(수)까지이다.

정답 - ④

해설 - ④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시위의 주최자는 그 금지통고에 불복하는 경우 금지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58.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위)

- ① 공무원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교섭대표와 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정부교섭대표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다.
- ③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 ④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정답 - ②

해설 - ②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은 보장되나, 단체행동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59.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사례 중 그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 ① A는 자신의 사업을 방해하는 B에게 양심을 품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를 하였다고 무고하려던 중 잘못된 행위임을 깨닫고 그 행위를 중단하였다. 이 경우 A는 「국가보안법」상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 ② 검사 A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를 한 B와 관련된 사건의 중요참고인인 C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관할법원 판사로부터 C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C를 구인하였다. 이 경우 A의 구인행위는 적법하다.
- ③ A는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B로부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확정판결이 난 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불응하였으나, B가 자신의 친족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 경우 A에게는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된다.
- ④ A는 「국가보안법」 제11조(특수직무유기)를 위반한 B에게 B가 동 범죄를 저질렀음을 알면서도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 경우 A는 「국가보안법」상의 죄책을 진다.

정답 - ④

해설 -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반국가단체 구성등, 목적수행, 자진지원,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등, 회합통신 등)**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9조 제2항). 11조인 특수직무유기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도 편의제공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60.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2011 경위)

- ①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②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공소유예'라 한다.
- ③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금품수수죄)는 금품수수의 목적이나 의도가 대한민국을 해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
- ④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답 - ①

해설 - ② 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공소보류**라 한다.

- ③ 금품수수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하나 금품수수의 목적이나 의도가 대한민국을 해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신분범이다.

61.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甲이 출소 2개월 전 재소 중인 교도소의 장을 통하여 자신의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A경찰서장에게 신고하였다. 이후 이루어져야 할 경찰관의 조치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A경찰서장 乙, 보안계장 丙으로 지칭)

- ① A경찰서장 乙은 甲이 거주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다면 지체없이 甲이 재소 중인 교도소장에게 통보한다.
- ② A경찰서장 乙은 보안관찰 처분대상자인 甲이 재범할 위험성이 충분하다면 보안관찰 처분을 결정한 뒤 이를 관할 검사에게 통보한다.
- ③ A경찰서 보안계장 丙 경감은 甲이 피보안관찰자로 선정된 후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甲으로 하여금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한 자와의 회합·통신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 ④ A경찰서 보안계장 丙 경감은 보안관찰처분 사안을 송치한 뒤 조사를 계속하고자 하므로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았다.

정답 - ②

해설 - ② 보안관찰처분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보안관찰처분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6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위)

- ①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 ②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난민여건인 정치적 의견과 박해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의 수용여부는 접수국의 정책에 달려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희망하는 자에게 직업을 알선해야 한다.
- ④ 보호대상자 중 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 가운데 임용·편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다.

정답 - ③

해설 - ③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법 제16조)

63.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위)

- ① SOFA는 다른 주둔군 지위협정과 마찬가지로 영토주권의 원칙에 의하여 '접수국 법령 존중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② 피의자가 미군 당국의 수중에 있더라도 살인 등 12개 유형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미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신병을 인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피의자 인도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③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대하여 미군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며, 공무집행의 범위에는 공무집행으로 인한 범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에 부수하여 발생한 범죄도 포함된다.
- ④ 주한미군이 훈련 중 우리나라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 주민이 해당 지역 정부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미군 또는 한미 합동으로 피해 조사 실시 후 전적으로 미군의 책임인 경우 미군이 75%, 한국정부가 25%를 배상한다.

정답 - ②

해설 - ② 인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4. 미국인 A는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대한민국으로 도망하였다. 이후 미국 정부로부터 범죄인인도청구서가 접수되었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 ① A의 범행이 정치범에 해당하는 범죄라 할지라도 미국의 국가원수를 살해한 경우에는 인도거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미국에서 범죄인인도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A에 대한 인도심사청구와 심사결정은 각각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한다.
- ③ 만약 A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속지주의 원칙상 미국 정부의 범죄인인도청구가 있을 경우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④ 미국인 A가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정답 - ③

해설 - ③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한국은 임의적 거절사유).

65. 1980년대 이후 세계화, WTO 경제체제라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국제경찰공조활동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바, 이러한 국제경찰공조활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① 해외도주 지명수배자를 수사함에 있어 도주국이 불분명한 중요 수배자에 대하여는 인터폴 사무총국에 인터폴 적색수배요청을 한다.

②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③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르면,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사항으로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 교환, 국제범죄의 동일증명 및 전과 조회,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 확인 및 그 조사를 들 수 있다.

④ 적색수배서를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라도 사안이 중할 경우 즉시 체포 후 수배국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수배국에게 통보해준다.

정답 - ④

해설 - 적색수배서를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 - 즉시체포 X, 소재확인 및 계속 동향감시 하고 수배국에 입국사실을 통보, 수배국에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6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위)

①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외국인인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② 1961년 비엔나협약 기준으로 외교특권은 신체·관사문서에 대한 불가침권과 접수국의 사법권·행정권·과세권으로부터 면제되는 치외법권을 말하나, 원칙적으로 접수국 통치권에는 복종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출입국사범을 입건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사건을 인계한다.

④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출입국에 필요한 CIQ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세관공무원의 통관절차(Customs),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심사(Immigrations), 검역관리공무원의 검역조사(Quarantine)를 말한다.

정답 - ②

해설 - ② 외교사절은 원칙적으로 접수국의 통치권에 복종하지 않는다.